Lee & Ko Global Commerce Institute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 3, 2024

세계 3위로 떠오르는 인도경제: 사업기회와 도전 안 충 영 교수 | 01

1. 최근 인도의 고성장과 세계 3위 경제전망
2. 인도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지향 Modinomics
3. 인도와 한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4. 한국의 對 인도 통상 및 FDI 추이와 진출 분야
5. 인도시장 진출의 유념사항

주요 통상일지 | 06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 기조 등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하기관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을 면밀히 파악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한데 모아 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의 모든 저작권은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합니다.

세계 3위로 떠오르는 인도경제: 사업기회와 도전

안충영 교수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前 한국-인도 전략대화 한국측 의장
- 前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장
- 前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前 동반성장위원장
- 前 APEC경제위원회의장
- 前 한국국제경제학회장
- 주요 저서 : South Korea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Dynamics and the Aftercare Ombudsman, Routledge, 2024

E: cyahn@cau.ac.kr

1. 최근 인도의 고성장과 세계 3위 경제전망

세계 최대 인구를 지닌 인도경제가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2년에 인도경제는 영국을 넘어서 세계 5위로 진입했다. Forbes지, The Hindu 紙, 그리고 인도정부까지 2027년에 인도의 GDP는 일본이나 독일을 넘어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적 복제약 허브국가로 코로나 백신을 자체 개발하여 대역병을 조기에 극복하고 강력한 내수와 투자에 힘입어 최근 몇 개 미니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이룩했다.

IMF 추계에 의하면 세계주요국 가운데서 2006-15년 기간 동안 중국은 연평균 9.6%의 압도적 고성장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선도했다. 같은 기간 인도 역시 연평균 6.8% 성장으로 높은 고성장 경로를 밟았다 (표 1). 중국의 2023년 1인당 GDP가 1만3천불을 기록할 때 인도는 아직도 1인당 GDP가 2,730불에 머물러 있는 전형적 저소득 국가이다. 중국은 지금 부동산 버블 등 중진국 트랩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인도는 저임금의 매력과 2014년에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수상의 강력한 개혁 개방정책에 힘입어 최근 경제성장에서 중국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다.

[표 1] 주요국 실질 경제 연평균 성장률과 일인당 GDP

(단위; %, US$)

	2006-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인당 GDP(24)
미국	1.6	1.8	2.5	3.0	2.5	-2.2	5.8	1.9	2.5	1.7	1.8	85,370
중국	9.6	6.9	6.9	6.8	6.0	2.2	8.4	3.0	5.2	4.6	4.1	13,140
인도	6.8	8.3	6.8	6.5	3.9	-5.8	9.7	7.0	7.8	6.8	6.5	2,730
일본	0.5	0.8	1.7	0.6	-0.4	-4.1	2.6	1.0	1.9	0.9	1.0	34,140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4
주: 2024, 2025 숫자는 추정치임. 1인당 GDPS IMF Data Datamapper MAP 2024

인도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7%를 넘는 고성장을 시현하여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지금 인도경제의 고성장 전망은 인도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웅변하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현재 인도의 주식 시장 가치는 4조3천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시장이며 인도 주식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간 10%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다. 지난 15~20년 동안 신규 상장에 따른 시장 수익률을 가정하면 인도 증시가치는 거의 10조 달러가 곧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작년 한해 인도 증시는 31%나 상승했다.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침체된 중국에서 인도로 본격적 관심을 돌리고 있다.

1인당 GDP로 볼 때 인도는 아직도 중국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인도의 전자공장 근로자의 임금은 중국에 비교하여 1/3~1/4에 그치고 있다. 잠재실업 인구가 많은 인도가 앞으로 성장지향 투자를 계속하여 근로자 1인당 자본 장비율을 올리면 인도의 장기 고성장은 경제발전 법칙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마련이다. 인도는 인구대국, 경제대국에 이어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 지금 군사대국까지 겨냥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와 한국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까? 글로벌 지향의 한국기업과 한국정부는 통상과 투자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국기업과 정부에 주는 인도의 기회와 도전이 무엇인가?

2. 인도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지향 Modinomics

중국경제가 지난 20 여 년 간 세계경제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였다면 이제 인도가 그 바통 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다양성의 나라다. 인도는 2023년 8월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에 우주탐사선 착륙시켰다. 인도는 세계 최정상의 물리, 수학, 이공 분야에서 수많은 엘리트를 보유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아직도 농업과 그 연관직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의 43%를 점유하고 있다. 아직도 농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15%나 차지하는 후진적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전국적으로 하루 2.15 불 수입 이하의 빈곤율이 10%에 이른다. 영양 결핍 인구도 16%에 이르고 있다.[1)]

모디 수상은 "인구가 곧 국부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도 인구는 2023년에 중국을 뛰어넘어 14억 1,700만 명으로 세계 최대가 되었다. 지금 중국 등 많은 나라가 인구 고령화와 감소화로 치 닿고 있다. 인도는 인구의 3분의 2가량이 35세 미만이고 국민 평균 연령도 37세이다. 중국의 평균 연령 47세, 한국의 57세와 비교하면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도의 젊은 인구가 교육기회의 확장으로 인간자본화하면 인도의 경제발전은 비약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나라의 경제발전은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으로 이행경로를 밟는다. 인도는 특이하게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바로 이동했다. 도시 영세소매업 위주의 자영업에 이어 콜 센터 등 컴퓨팅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등이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세계의 허브 역할을 했다. 따라서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2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인도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진단 할 수 있다.

2014년에 집권한 모디 총리는 오랜 네루형 자급자족의 대내지향 정책 (Nehruvian economics)에서 탈피하고 수출주도형 동아시아 발전 모델을 답습하는 "Look East" 정책을 도입하였다. 바로 인도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Make in India"라는 정책구호를 내걸었다. 이제는 인도 제조품으로 대체 한다는 "Self-Reliant India"로 전향하고 여기에 컴퓨팅 서비스의 강점을 살려 "Digital India" 정책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요약하면 제조업 육성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진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발전 정책수립에서 인도는 후발주자의 이점(Latecomer's advantage)을 누릴 수 있다.

인도경제의 고성장 이륙 과정에서 생필품과 중간 자본재의 폭발적 수요가 예상된다. 인도의 방대한 내수시장은 다국적 기업에 이제 중국보다 인도시장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중국은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으로 미·중 안보통상분쟁에 휘말려 공정경쟁을 요구하는 미국으로부터 관세 및 비관세 영역에서 높은 제재를 받고 있다. 많은 나라와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서도 중국을 떠나 포스트 차이나로 인도를 탐색하고 있다.

인도는 고성장을 위하여 취약한 도로, 교통, 항구, 에너지, 상하수도, 주택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근대화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저생산성 늪에 있는 농업 부문에도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인도 정부는 또 최근 3년 동안 SOC에 대한 투자를 매년 30% 넘게 늘리고 있다. 모디 정부는 개혁정책으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2017년 도입한 상품서비스세(GST)가 구조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GST는 연방정부와 29개 주정부에서 서로 다르게 부과하던 각종 부가가치세를 통합한 제도다.

인도는 모디노믹스가 표방하는 인도의 고성장 유도를 위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스타트업 생태계와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젊고 혁신적인 노동력, 디지털 전환과 금융체계의 변화, 투자 및 진출기업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 마이크론의 10억 불 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에 인도는 투자금의 80%를 파격적으로 지원했다.

인도정부의 적극적 FDI 유치정책과 인도시장 자체의 매력 때문에 2021/22 회계연도에 대인도 FDI는 835억 7000만 불로 역대 최대를 기록 했다. 지난 20년 동안에 인도의 총 FDI 유입액은 20배 정도로 늘어났다. 2022년 6월 UNCTAD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FDI 유입량은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글로벌 순위 7위로 상승하였다.

3. 인도와 한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인도는 지금 핵 보유국에 이어 세계 정상급 우주탐사 기술을 과시하고 있다. 군사비 지출에서도 세계 3위를 기록하면서, 인도는 국제정치와 안보지형에서도 독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견국이다. 세계 최대 인구, 경제적 역동성, 세계적 엘리트 고급 두뇌를 가진 인도는 미국, 중국, EU, 러시아 등

세계 어떤 나라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외교관계 설정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Global South에 이르기까지 외교·안보 면에서 이른바 다변적 소자주의연대(Multi-aligned minilateralism) 정책을 유효하게 추구하고 있다. [2)]

인도는 건국 후 제3세계 비동맹운동(Non-alignment movement)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인도의 건국과정을 지원한 구소련과 인도는 긴밀한 우호관계를 지니고 있다. 인도 무기체계의 대종은 소련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무기의 유지보수에도 현재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도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1996년에 정치·경제·안보 협의체로 창설한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도 2015년에 가입했다. 인도는 G7에 대항하여 개발도상국이 주축을 이루어 Global South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브라질, 러시아, 중국과 함께 2009년에 창립한 BRICs의 회원이기도 하다. 이들 국가는 세계인구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201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입하면서 BRICS로 변경되어 세계정치경제의 다극화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불법 군사시설 건설, 중국과 접경지 Galwan에서 2022년에 일어난 중국-인도 간 유혈 충돌, 중국의 일대일로(BRI)를 통한 중국의 패권적 행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인도 태평양 4자 안보협의체(Quad)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도는 지금 안보 면에서 친미성향으로 기울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태 전략"을 천명하여 종래의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위주의 외교안보·경제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3)]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한·미 안보동맹, 親中과 親北 정책에서 '전략적 모호성' 기조에 비교하여 대미관계를 포괄적 안보가치동맹으로 격상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원칙과 상호주의로 대응하는 '전략적 명료성'으로 선회하였다. 미국과 일본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추구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개념에 한국은 '번영'이라는 요소를 추가 했다.

미·중 경제안보 격돌, 우크라이나 전쟁, 자국우선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하여 세계경제에 지경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가 일어나고 있다. 안보와 정치 체제에서 뜻이 맞는 나라들끼리 공급망 유연성 확보를 위한 소자주의의 블록화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층적, 포괄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한국이 추구하는 인·태 전략의 다변적 외교 추진에서 인도는 자연스럽게 경제협력과 안보측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핵심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의 지경학적 변동과정에서 일본과 인도가 최상급 특별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인도 진출은 한국보다 늦다. 그러나 일본은 풍부한 공공원조 자금을 이용하여 뭄바이와 아마다바드를 연결하는 일본형 "신칸센"과 뭄바이와 뉴델리를 연결하는 화물고속열차를 건설하고 있다. 인도가 가장 필요로 하는 SOC 투자에 일본은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제일 먼저 제안한 Quad에 인도가 동참하면서 안보적 측면에서 대중국 견제에 함께 나서고 있다. 일본이 ODA로 건설하는 고속철도와 도로 곳곳에 일본기업의 전용단지를 만들고 있다. 이로써 일본은 경제협력과 Quad 기반의 안보협력을 함께 묶어 인도와 최상급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4. 한국의 對 인도 통상 및 FDI 추이와 진출 분야 [4)]

한국과 인도는 2010년에 낮은 수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시켰다. 양국관계는 2015년 드디어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 (Special Strategic Relation)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 타결된 일본-인도 CEPA에 비교하여 양허가 낮은 수준이다. 한·인 CEPA를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는 노력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인도에서 이룩하고 있는 만성적 무역흑자 때문이다. [표 2]에서 보듯이 2022년과 2023년에 한국의 대인도 교역액은 278억 불과 250억 불을 기록 했다. 2018년 이래 한국의 대인도 무역 흑자는 연평균 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품목별로 본다면 인도 정부의 인프라 개발 확장정책에 따라 철강 완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5G 네트워크 출시로 통신망 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반도체 및 무선통신기기 등이 수출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도로부터 수입에서는 원료 등 기초 중간재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양국은 2022년 양국 교역량을 500억 불 수준까지 높이기로 합의했다.

[표 2] 한국의 대-인도 교역추이

(단위: 백만 불)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15,606	15,096	11,937	15,603	18,881	17,950
수입	5,885	5,565	4,901	8,056	8,901	6,730
총교역액	21,491	20,661	16,838	23,659	27,782	24,680
무역수지	10,108	9,721	9,531	7,037	9,980	10,920

자료: K-Stat,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표 3] 한국의 연도별 대인도 투자진출 현황

(단위: 백만 불,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980년 이후 누계
투자금액	1,072	453	625	336	371	453	7,684
신고건수	410	452	308	246	186	n. a.	4,662
신규법인수	119	130	74	56	60	75	1,40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4.5.)
주: 1980년 이후 누계는 2023년 수치가 제외된 것임

한국과 인도 사이의 상생 동반성장 협력을 위하여 한국은 대인도 FDI를 크게 늘려 한국의 무역 흑자에 대한 균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은 지난 30여 년에 걸쳐 중국투자에 몰입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에 편중된 투자가 유연한 공급망 유지에 위험하다는 점을 경험했다. 특히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인의 대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는 限韓令과 전략적 희소자원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통상 무기화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공급망의 유연성을 확보를 위하여서도 중국에 대한 한국의 FDI 집중도를 줄여야 한다. 중국의 저임금 메리트도 사라지고 있다. 한국은 이제 중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단순노동과 기능인력도 풍부한 세계 굴지의 인도시장을 post-China로 겨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도와의 통상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한국과 ASEAN이 구축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확장하여 한국 -> ASEAN -> 인도로 연결되는 삼연성 연대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한국 기업은 인도에 75개의 신규법인을 설립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인도진출 해외투자 누계액은 약 77억 불을 기록했고 진출 법인 수는 1,400개를 기록했다. 한국의 삼성, 현대, LG 등은 1990년대 중반에 인도에 진출하여 반도체, 전자, 자동차 분야에서 성공 스토리를 남기고 있다.

인도는 Self-Reliant India(Make in India 2.0) 정책 아래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수출지원제도(RoDTEP), 인도경제특구(SEZ)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00~2021 기간 동안, 인도 측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인도 누적 투자는 51억 달러를 기록하여 인도 전체 FDI 유입액의 0.9 %에 불과 하지만 일본은 363억 달러를 기록 전체의 6.3%를 차지하였다. 한·일 경제규모를 비교할 때 한국의 FDI 진출은 일본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저조하다.

14억 인구 인도경제가 1인당 소득 3천 불 대에서 본격적 이륙(Take-off)을 할 때 FDI 진출 분야는 초기, 중기, 후기 산업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주산업, 세계적 복제약 허브와 연관한 바이오, AI 및 반도체, 에너지, 스마트 시티, 제조업 소재 부품업, 자산운용 등 금융산업, 농촌개발, 중소 부품소재산업 등이 유망하다. 이들 분야에 이미 진출한 기업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방위산업도 유망한 분야이다. 인도는 지금 국방비를 매년 10% 증가시키고 있다.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가는 중국에 필적하고 파키스탄 등 국경분쟁, 해양안보에 대비하여 인도는-2023년 군사비로 762억 달러(GDP의 2.3%)를 투입하는 등 세계 3위 무기 수입국(세계 방산 시장에서 11% 비중)이 되고 있다. 한화가 K9 자주포의 현지 합작 생산에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다. 인도는 한국기업의 독자 진출보다 인도기업과 합작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인도는 기술이전과 학습효과 등을 겨냥하고 있다.

5. 인도시장 진출의 유념사항

인도정부의 친기업 행보에도 불구하고 인도 진출에는 많은 리스크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인도에는 전근대와 초현대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인도는 1990년대 초까지 기계, 광업, 통신, 전기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하여 사회주의적 경제운용을 한 네루형 경제유산이 있다. 그 핵심은 1947년 독립 후 1990년대 초까지 모든 투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부통제·면허제도(License Jar)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 경제개입 유산은 지금도 잔존하고 있다. 2020년대 들어 벤처 캐피털이 인도에 우후죽순처럼 등장 유니콘이 연속 등장하지만 인도정부의 반기업적 행태와 각종 면허 규제는 투자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다.

인도가 중국과의 GDP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이 되기 위하여 젊고 풍부한 노동력을 인적 자원으로 배양하여 제품 및 프로세스 기술진보를 이룩해야 한다. 따라서 인적 자원의 질을 결정하는 교육과 직업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국의 대학 진학률이 72%이나 인도는 32%이다.

인도는 강력한 지방분권주의를 오랫동안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지방정부에 따라 조세와 사업인허가 절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가 지방에 따라 상이하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조세정책이 통용되지 않아 일관되고 투명한 과세제도의 개선은 커다란 숙제이다. 또한 사회주의형 정부개입의 유산으로 관료들의 부패가 온존하며 Red tape가 존재한다. 경제 관련 법체계의 잦은 변경 등 때문에 세계은행의 2019년 사업환경Ease of Doing Business 지표에서 인도는 62위에 랭크 되어 있다. 한국의 6위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도의 후진적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각국의 빅테크는 미래 인도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노크하고 있다. 인도와 한국은 안보면에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가치를 적극 공유한다. 인도는 경제와 안보면 에서 한국의 인·태 전략의 핵심적 파트너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인도도 Self-Reliant India 구축에 한국을 우선순위 협력 대상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 사이에는 역사적 구원관계가 없다. 오히려 식민지배를 거친 공통점이 있다. 인도와 한국은 앞으로 안보가치에 이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우방국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중국의 변방으로서 그리고 군국주의 일본에 의한 굴종의 역사를 경험했다. 신뢰도가 약한 14억 중국에 비교하여 신뢰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14억 인구 인도와의 공생을 위한 본격적 우호관계 정립은 이제 한국의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인도는 2023년 G20 호스트 국가로서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 2023년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했다. 올해 인도 총선이 있었다. 모디 정부의 힌두 근본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여론 때문에 가까스로 총선에서 다수당을 유지하게 되었다. 비록 모디 정부1, 2기 때처럼 강력한 개혁 개방 정책에 부분적으로 제동이 걸리지만 이미 고속성장 열차를 탄 인도의 질주는 멈출 수 없다. 한국과 인도는 앞으로 뜻이 맞는 파트너(Like-minded partner)로 미국과 중국의 자국이익 중심의 일방적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하여 규범에 입각한 국제자유질서와 양국 공동의 번영을 창달하는 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굳게 해야 한다.

---

1) IMF (2023), India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23/426, p.39

2) 자세한 내용은 Jagannath Panda and Choong Yong Ahn, *India and South Korea Relations in Indo-Pacific:: Minilaterlism to Multilateralsim*, Routledge(forthcoming)

3) 소자주의 등장과 함의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안충영 (2024)『“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외통상 및 기술협력 방향’, 『한국경제 미래를 설계하다』서經硏연구총서 42, 한울, pp 484-505

4) 본절의 주요내용은 안충영(2023) "한국정부의 인태 전략과 한국-인도경제협력, J commentary 2023년 제 9호, 2023,3,29 pp 1-5 에 크게 의존 하였다.

▫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4.4~5	무역기술위원회(TTC) 제6차 회의
4.5	광물안보파트너쉽포럼(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Forum) 개최
4.5	미중 무역 워킹그룹 첫 회의
4.5	미 국토안보부,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 수출통제대상 및 관세 감사 확대, 섬유업계 불법 무역 단속 강화 전략 발표
4.8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TSMC에 16조원 지원
4.8	농산품 수입 보호 장치 강화한 우크라이나 무역자유화 조치 연장에 합의
4.8	AUKUS 장관 회담
4.9	이스라엘에 대한 시멘트, 철강 등 품목 수출 제한 발표
4.10	전자제품 수입 제한 규제 도입
4.10	EU 의회, 에너지 분야 메탄 배출 규제 법안 최종 승인
4.10	EU 의회, 대형화물차 및 버스 2040년까지 CO2 90% 감축 법안승인
4.11	EU 의회, 탄소 제거 인증제도 도입 규정 최종 승인
4.11	첫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의
4.11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절차와 집행 규정 강화 발표
4.12	미 상무부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업체들 추가
4.12	미 하원, 포괄적 인도-태평양 무역 전략 위한 법안 발의
4.12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수입 금지
4.12	유로7 최종 채택
4.12	EU 이사회,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개정안 최종 승인
4.14	'포괄적전략동반자' 격상 합의
4.15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삼성선자에 9조원 지원
4.15	'유럽태양광헌장' 서명

▫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4.16	제4차 경제-금융 분야 워킹그룹 회의 개최
4.16~19	IRENA 제14차 총회
4.17	한국, IPEF 공급망협정 발효
4.17~18	EU 특별정상회의
4.17	베네수엘라 석유, 가스 수출 다시 제재
4.17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
4.18	이란 드론, 철강, 자동차 업계 제재
4.18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4.19	미 하원, '이란산 석유 거래하는 외국' 제재 법안 통과
4.20	미 하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태 지원 법안 통과
4.20	미 상원, 해외정보감시법 702조 2년 연장 가결
4.22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4.23	EU 의회,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에 관한 규정' 최종 승인
4.23~29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4.23	EU 의회,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수입품 판매 규정 가결
4.23	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연방 의회 통과
4.23	EU 의회,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ESPR)' 최종 승인
4.23	EU 의회, '제품 수리 촉진 공동 규칙에 관한 지침' 최종 승인
4.24	EU 의회, '공급망실사지침' 최종 승인
4.24	EU 의회, 강제노동 제품 판매금지 규정 가결
4.24	EU 의회,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최종 승인
4.25	EU 의회, 탄소중립산업법(NZIA) 최종 승인

▫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4.25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금지
4.26	새 관세법 통과
4.26	제 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
4.27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확대, 인상
4.30	미국산 제품 보복관세 면제 7개월 연장
5.1	러시아 군수산업 지원한 중국, 홍콩 기업들 제재
5.2	이스라엘과 교역 전면 중단
5.2~3	OECD 각료이사회
5.3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최종규칙 발표
5.6	프랑스-중국 정상회담
5.9	미 상무부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기업, 기관 추가
5.13	러시아 우라늄 수입금지법 서명
5.14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 발표
5.15	미 하원 상임위, '바이오 보안(Biosecure Act) 법안' 가결
5.16	양면형 패널에 관세 인상 및 동남아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유예 조치 종료 및 IRA 세액공제 세부 규정 발표
5.16	미 상부무, 중국 섬유업체 26곳 수입 제한 대상 추가 지정
5.17	튀르키예와의 자유무역협협정 파기
5.20	미국 빙산업체들 제재
5.21	휘발유 수출금지 6월말까지 일시 해제
5.22	EU 이사회, 'AI법' 최종 승인
5.23	핵심원자재법(CRMA) 발효
5.24	EU 이사회,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최종 승인

▫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5.24	중국산 제품 200여 품목에 다시 관세 부과
5.26~27	한·중·일 정상회의
5.27	EU이사회, '탄소중립산업법(NZIA)' 최종 승인
5.28	제6차 한국-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5.29	EU-호주 양자간 핵심광물 전략 파트너십 협정 서명
5.29	한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식 서명
5.29	호주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추가 해제
5.30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탈퇴 최종 합의
5.30	항공, 우주 구조 부품 등 추가 수출 통제
5.31	대만에 대한 관세 감면 추가 중단
6.2	멕시코 대통령 선거
6.2	철강 세이프가드 2년 연장
6.3	제9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무역·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6.4~5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6.5	한·미·일·인도·EU '바이오제약연합' 출범
6.6	IPEF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정 서명
6.6	제4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6.6~9	EU 의회 선거
6.12	중국 전기차에 최대 38.1% 잠정 상계관세 부과 결정
6.13~15	G7 정상회의(이탈리아)
6.17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6.21	14차 대러시아 제재 합의(LNG 포함)

▫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6.21	환율관찰국에 7개국 지정
6.21	첨단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등 3대 첨단기술 투자제한 규칙 제정안 발표
6.22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6.26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6.27	상무부, 인테그리스에 1천억원 보조금 지급
6.26	플라스틱 사용 제조업 대상 재생재 사용 보고 의무화
6.27	이란산 석유와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데 관여한 UAE 기업 제재
6.29	희토류 관리 조례 발표(10월 1일 시행 예정)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발간 목록

❖ 2024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 동향과 시사점 - EU,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4.4
2	[Special Issue Brief] 2024 미국 대선: 주요 관전 포인트 대선 · 의회선거 시나리오와 통상 리스크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4.3
3	2024년 7대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와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4.1

❖ 2023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국제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경쟁법 입법 동향: 미국과 EU의 사례 분석	정환 변호사(광장) 김영서 변호사(광장) 정문경 연구원(광장)	2023.10
2	EU의 新통상법 추진 동향과 우리의 대응	허난이 연구위원 박수령 연구원 문희은 연구원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3.5
3	[Special Issue Brief] The Reorganization of Global Supply Chains in a Changing World	Sébastien Miroudot 박사(OECD)	2023.2
4	2023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2022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해외투자심사제도의 도입 추진 및 평가와 전망: 미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고준성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2022.9
2	[Special Issue Brief] 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허난이 연구위원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8

3	[Special Issue Brief]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해설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박정민 변호사(광장)	2022.7
4	대(對) 러시아 제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	이재원 선임전문관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5
5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2
6	EU 탄소국경조정세 (CBAM)의 시사점과 대응 방안	이상준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1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The U.S.-China Strategic Confrontation on Trade: How Supply Chains Became Strategic National Resources under Trump, and How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and Expand That Policy	J.Scott Maberry (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LLP)	2021.7
2	CPTPP와 국영기업	정기창 외국변호사(광장)	
3	[Special Issue Brief]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 양자 '디지털무역협정'의 등장과 최근 논의 동향	곽동철 교수(경북대학교)	2021.5
4	미국과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과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설동근 변호사(광장) 이준용 외국변호사(광장) 김상민 변호사(광장)	2021.4
5	중국 수출통제법을 통해 본 중국 통상환경 동향	김윤희 박사(KOTRA)	
6	[Special Issue Brief] 브렉시트 이후 영국 및 EU의 대외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박성훈 교수(고려대학교)	2021.2
7	2021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1.1

❖ 2020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Special Issue Brief] RCEP 서명의 의미와 시사점	강문성 교수(고려대학교)	2020.12

2	[Special Issue Brief] 바이든 당선자의 통상정책에 대한 워싱턴과 브뤼셀의 시각 • Trade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of the US and the Implications to the Korea-US Trade Relations • Biding Time for Biden's New Trade Agenda	Joel D. Kaufman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이호석 박사(ECIPE)	2020.12
3	The Reshuffle of GVCs in the Era of US-China Decopuling and COVID-19	Sébastien Miroudot 박사(OECD)	2020.10
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Global Value Chain 현황과 변화 전망	이항구 연구위원(한국자동차연구원)	
5	USMCA 발효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	강준하 교수(홍익대학교)	2020.7
6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도	안유화 원장(중국증권행정연구원)	
7	[Special Issue Brief] The USMCA: An Introduction to the Rules of Origin for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R.O. Cunningham 변호사 G.S. McCue 변호사 Z. Simmons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8	Brexit: The imminent crisis in the EU-UK trade negotia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이호석 박사(ECIPE)	2020.3
9	우리나라 기업지원프로그램의 보조금 특정성 사례분석 및 시사점	조영재 변호사(광장)	
10	2020년 글로벌 통상여건의 불확실성과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0.1
11	[Special Issue Brief] 미-중 경제 · 무역협정: 주요 내용 및 분석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2019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Special Issue Brief]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맞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디지털세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동향 및 시사점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박정준 연구원(광장)	2019.8
2	[Special Issue Brief]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이재원 연구원(광장)	2019.7
3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미중(美中) 무역분쟁, 그 다음 수순은?	이재민 교수(서울대학교)	
4	미중(美中) 무역협상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장윤종 원장(포스코경영연구원)	

5	Trade Policy Implication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Sébastien Miroudot 박사(OECD)	2019.7
6	미국 보호무역조치의 새로운 무기(new weapon), 통화보조금: WTO 보조금 협정 합치성 분석을 중심으로	주현수 변호사(광장)	
7	BREXIT의 배경, 현황 및 전망	박성훈 교수(고려대학교)	2019.5
8	BREXIT에 대비한 "무역연속성협정": 영국-칠레 간 협정 분석을 중심으로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9	WTO 개혁 논의: 상소기구 개혁을 중심으로	김혜수 변호사(광장)	
10	CPTPP on the Go: Next Step is Enlargement	Shujiro Urata 교수(와세다대학교)	2019.1
11	The USMCA: What it Tells us about U.S. Trade Policy and What it Means for Korea	Richard O. Cunningham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12	미국의 독자적 경제 제재와 기업의 딜레마	이현송 변호사(광장)	

❖ 2018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Targeting China	Jeffrey J. Schott 박사(PIIE) Lucy Lu 애널리스트(PIIE)	2018.10
2	Moving from One Landmark to the Next: What the New EU-Japan EPA Means for Korea	이호석 박사(ECIPE)	
3	국제통상과 안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중심으로	정기창 변호사(광장)	
4	최악의 세계무역환경과 우리의 대응	박태호 원장(광장)	2018.7
5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규제 현황과 평가	최석영 고문(광장)	
6	EU의 무역구제규범의 현대화: 최근 규범 개정에 대한 분석 및 WTO 합치성 검토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 법무법인(유) 광장 [홈페이지]에서 모든 이슈브리프 발간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